

여야 오늘 추경안 증액 처리 합의

정기국회 정상화 길 열어

공기업 지원 원칙적으로 양기호

여야는 17일 학자금 및 노인 틀니지원 등 '민생예산' 명목으로 3천34억원을 반영한 추경안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정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별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6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따라서 추경 예산 규모는 정부가 예초 편성한 4조5천654억원보다 2천943억원 줄어든 4조5천711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3당은 특히 삭감기로 한 5천977억원 가운데 3천34억원을 민생대책 예산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증액 대상 예산은 ▲ 학자금 지원 2천500억원 ▲ 경로당 난방비 지원 508억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틀니 지원 26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국고 예산 보조를 통한 가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뒤 다음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경식 대변인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고예산 보조' 합의사항과 관련,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에 방점을 두었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에 의미를 두었다"고



한나라당 홍준표(가운데), 민주당 원혜영(오른쪽), 자유와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예산안 처리 협상에 앞서 서로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했다.

이 같은 여야의 극적 합의에는 추석 전까지 강행했던 민주당의 양보가 큰 힘이 됐다.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을 배제한 채 표결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막판까지 원내대표 회담, 정책위의장 간 대화, 원내 수석부대표 간 협상 등 각종 대화 채널을 동원한 타협에 나선 것이다.

추석 전 합의의 일본 직전까지 갈 정도로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민생예산'으로 인식되는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국회 예결위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합의의 전제조건이 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려는 촉구의 의미로 담겨있다"고 언급, 사실상 사퇴 요구를 철회하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

이처럼 여야가 난산 끝에 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파장이 우려됐던 정기국회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참여정부 인사 '표적 사정' 논란

국회 법사위 박영선의원 의혹 제기

金 법무 "관련 보고 받은 적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구여권 인사에 대한 '표적 사정'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를 또는 프리임, 예경, 강원랜드 등 참여정부 시절 성장했던 기업에 대한 수사가 과연 형평에 맞는지는 점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며 "항간에는 참여정부 출신, 호남 기업 죽이기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떠돌 정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지난 5월2일 고발된 지 4개월이 지난데도 결론이 안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누구라도 잘못

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지난 정부의 일들에 대해서만 구체적 수사가 공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검찰의 신중함 태도를 주문했다. 장은석 의원은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소신껏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주광덕 의원은 "권력과 권력을 놓친 자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과 시의적절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지난 정권 인사와 관련된 사건은 없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만 일부 오해가

있다면 어떻게든 시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다른 비리 범죄 행위가 포착되거나 첩보가 수집돼 자연스레 시작된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며 "사정정곡을 일부러 만든 것도, 표적 수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들어 검찰과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지적,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 의원은 "저도 거기서 좀 살아 나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어어컨, 난방 시설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도 교도관 밖에 없고,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기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적이 있는데 수사관이 담배 연기를 푼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만 일부 오해가

/연합뉴스

檢, 노 전 대통령 방문조사할 듯

국가기록물 무단 방출 수사...靑 관계자 소환조사는 마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사실상 이번 사건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아 검찰이 조판간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또는 서면 조사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가기록물에 의뢰 고발당할 10명의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행정관들에 대한 조사를 이날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4개에 대한 분석 결과, 노 전 대통령의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물의 전산 자료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문제의 파일들이 일상적 메모이거나 중복 파일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물에 정상적으로 보관하지 않은 중요 문서를 사사적이 봉하마을로 갖고 갔거나 제3자에게 국가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

무지원시스템인 e지원과 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봉하마을에 설치한 행위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위법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일단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결정된 최종 의사결정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방문 또는 서면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최장 30년까지 일반에게 공개가 금지된 전산기록을 사지로 갖고 간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서면보다는 방문조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관행적으로 검찰은 무형의 처벌을 염두에 둘 때에만 서면조사 방식을 택했으며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할 때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해왔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심각한 결함"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로또복권의 판매 정보를 담은 시스템간 데이터가 불일치하고 심지어 당첨번호가 확정된 뒤 복권 판매금액 산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로또복권 운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로또복권 시스템은 단말기와 메인 시스템, 감사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는데 모든 데이터는 전용선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스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로또 사업자인 나눔로또가 로또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2일 이후 올해 8월9일까지 총 36회차 중에 메인시스템과 감사시스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12차례나 발생했고, 2개의 감사시스템 간에도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3차례나 있었다.

관련 규정상 추첨 생방송(매주 토요일 오후 8시45분) 15분 전까지 감사시스템에서 판매금액을 정산해 출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8시30분 이후에 출력한 경우가 5차례나 되고, 로또 번호가 확정된 후에 출력이 이뤄진 적도 한 차례 있었다.

/연합뉴스

불씨 꺼지지 않는 '홍준표 퇴진론'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소장파 의원들이 17일 후임 원내대표의 '인선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홍준표 원내대표의 퇴진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 퇴진론을 주장하는 친이 소장파 의원 10여명은 지난 16일 저녁 모임을 갖고 "당내 새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대타당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졌던 172석이 사본오열돼 무의미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따라서 친이, 친박(친박근혜)으로 양분된 당을 극적으로 통합하는 새 흐름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홍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후임 원내대표로 '친박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당 원내대표의 비종과 역동성 등을 감안할 때 김무성(57)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친이쪽에 가까운 당 화합형 인사로 부산 출신 정의화 의원도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소장파계파의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어쨌든 홍 원내대표의 사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이 소장파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은 다중포석이라는 해석이 없지 않다.

홍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그 균형을 깨뜨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

"재산등록 공무원 28% 존비속 재산고지 거부"

행안부 이윤석의원 제출 자료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 가운데 28.1%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 거부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10만6천260명 가운데 2만9천872명(28.1%)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를 악용해 재산분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공무원 합격의 대세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 한빛고시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

전국 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앞 (062)234-0234

개강 10월 1일

공무원합격압도적 1위

교육행정/ 농업직/ 기술직/ 사회복지/ 출판직

= 47년간 공무원 시험에 전국 최다의 합격에 대세(大勢)를 이룬 중후한 無等을 만나세요 =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

강좌직종: 행교세관법검청교보보복군소기전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10월 1일(주)아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www.mdgosi.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2009년도 시험대비반

www.hanbitgosi.co.kr

361-8111

268-8111